

# 새정치민주연합

## 성명서

오늘 충청지역에서 새로운 노동자 식구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당원으로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책당원은 노동·온라인·직능·재외국민 등의 부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당원을 말하며, 앞으로 우리 당의 노동분야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안, 즉 5대 법안과 2개 행정지침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악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다.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기본권 강화를 당론으로 추진해 왔으며,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표 가짜 노동개혁을 즉각 철회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재벌개혁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소득불균형 해소, 청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안정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

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당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체 토론과정에서 우리 당의 진짜 노동개혁인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고용 없는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사상 초유의 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의 소득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GDP 대비 40%(580조)에 달하는 국가채무와 113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책을 잘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충청지역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지방의 대학도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한지 11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및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충청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충청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친노동자적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단한 현장의 충청지역 노동자들과 어깨를 마주할 것이다.

충청지역 노동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위원장 나소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노동위원장 이규희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지역위원장 일 동